

새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방향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전 통일원 차관

‘글로벌 선진 코리아’를 위한 변화와 실용 외교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2.25(월) 취임사에서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념을 넘는 실용을 통해, 그리고 개방,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진 한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하였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경제 살리기’에 있기는 하나, 그동안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통해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민족끼리’라는 감성적 슬로건에 얽매어 세계사의 흐름과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집착했던 지난 정부와는 비교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 혼선과 미숙으로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는 강화되고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은 악화되었다. 북한의 존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우방들의 신뢰만 상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자체에 기존 우방들이 전폭적 지지를 표하는 것도 그동안의 방향 감각 실종을 치유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5일 새정부의 5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21대 전략, 192개의 국정 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잘사는 나라’, ‘따뜻한 나라’, ‘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 지표’로 ‘글로벌 코리아’,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내걸었다.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한다는 국정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 외교·능동적 개방, 세계로 나가는 선진 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 등 5대 전략을 세우고 그 아래에 47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글로벌 선진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과 과제 선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 안목과 마음가짐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변화와 혁신이 우리의 외교·안보 분야에도 예외일 리가 없다.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일본·러시아에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에 놓여있고 그만큼 우리의 안전 보장이나 생존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에 노출된 취약한 구도라는 것이었다. 과거 불행한 역사와 분단의 현실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최첨단 문명은 한반도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갇혀진 불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곧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인류의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 최첨단 문명의 변화가 과거의 시간·공간 개념을 바꾸어 버렸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국정 과제는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과 국제사회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방향을 냉철하게 인식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는 우리가 참여하든 아니하든 최첨단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쏠살같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 국가군에 들어가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과거에 안주해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라는 안이한 방법에 탐닉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나간 10년과 같이 과거 지향적 정책으로 세계의 복합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 주류의 흐름에서 낙오되고, 우리의 경제도 소득 2만 달러 선에서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실용주의와 창의적 혁신만이 역사적 과제 해결할 수 있어

이명박 새정부의 국정 과제는 기본적으로 국제 여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위에서,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들도 매우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몇 가지로 요약해본다.

첫째, ‘글로벌 코리아’의 국정 지표 하에 세운 개별 정책들은 매우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창조적 실용 외교를 구현하는 전략으로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해 시장을 넓히며 다변화하고, 대외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자원빈국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세계 경쟁의 흐름에 앞서서 우리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들이다. 불행한 약소국이었던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추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선진사회가 되기 어렵듯이, 국제사회에서도 뒤진 나라에 대한 배려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근대적 부국강병책에 집착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작지만 강한 국가로서의 연성 파워를 키워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높임으로써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외교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국제사회에의 기여 확대와 인권, 환경 외교·문화 외교 강화는 바로 중강국으로 나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다.

인구 1700만 명의 네덜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이에 위치하고 국토의 1/3이 해수면보다 낮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면과 실용주의로 사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세계의 조류를 앞서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발도상국 원조 강화, 인권 외교 등 보편적 가치 추구를 주요 대외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데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활발한 인권, 환경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존경과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안전 보장을 확보해 나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강소국들도 좋은 예이다.

둘째, 주변의 강국에 낀 나라는 전략적으로 멀리 있는 큰 나라와 튼튼한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 전략 동맹 강화도 미국이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계속 주도해갈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을 같이 하는 우리의 우방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며,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얻은 실용주의 사고의 결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와 보완, 국방 개혁 2020 보완도 같은 차원의 것이다. 냉전 체제 이후 유일한 슈퍼파워가 된 미국이 하드파워 만으로 세계 질서를 리드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아직도 개인의 창의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사회·교육 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계속해나감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선도할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튼튼해질 때, 중국·일본·러시아·중앙아·아세안·인도를 포함한 주

변 주요국들과의 협력도 원만하게 강화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 구성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싫든 좋든 주변 강국의 협조가 통일 과정이나 통일 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구 소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우리민족끼리’라는 단힌 민족주의의 틀에 매여 경제성과 정책 목표를 도외시한 채, 이미 실패한 북한 체제에 일방적 지원을 계속하는 이념 과잉의 통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무조건적 대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북한의 실질적 개혁·개방을 통해 본격적 경제 지원을 하여 북한이 10년 안에 3천 달러 소득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도 예들러 가지 않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미 남·북한 간 경제력 차이는 40대1로 벌어졌고, 군사력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은 실패의 늪에서 자력으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남한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세계화·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가면 된다. 결국 우리가 도달할 목표는 주민이 자유·인권·행복을 향유하는 통일이다.

선진도약 염원 민심 결집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530만 표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한 것은 경제 문제뿐 만아니라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확인해준 것이고, 새정부는 대외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적 동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남·남 갈등을 야기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던 그 기초 위에서 선진화·세계화로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지도자와 온 국민이 결집하여 사회 분위기를 일신한다면 국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야기된 남·남 갈등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난국 상황에서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내세운 국정 지표, 그리고 국민들의 동참이 그 국가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세계의 주역으로 만든 좋은 예이다.

외교·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있듯이,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도 서로 연계되어 있다. 대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제는 한국사회 내부가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힘이 제대로 결집되고 발휘될 수 있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해지고 통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